

혁신 없는 강남진보 한계 드러내… “새 시대정신 구현해야”

강남진보를 말하다

- 글 싣는 순서 -

<上> 돈 많은 강남진보의 위정자
<中> 강남진보, 어떻게 봐야하나

<下> 강남진보의 한계와 전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정책 구상 발표를 마친 뒤 승강기를 타고 있다.

자체로도 충분히 공분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당도 ‘강남진보’의 추락을 막기는 힘든 모양새다. 의명을 요구한 더불어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진보의 입장에서 강남진보는 공격당할 건수가 많았다. ‘레토릭(웅변·설득)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번 정권의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조했다.

◆강남진보, 앞으로의 전망은

전문가들은 ‘강남진보’ 등 정치적 단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화의 속성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진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낮고 환경, 여성, 다문화 등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뤄내기도 어렵다”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서 진보적인 속성을 끄집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진보가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최근에 조 후보자로 인해 ‘강남진보’라는 단어가 다시금 이슈가 됐는데, 이는

옳지 않다.”면서 “실상은 그의 ‘내로남불’을 지적해야 한다. ‘조국이 진보성향을 갖고 강남에 살고 등…’ 이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념 문제가 아닌 기본적으로 인간의 됨됨이를 지적해야 한다. 나아가 강남진보 등 정치적 용어 자체가 지금의 다양한 현상 자체를 담지 못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진보’의 아이콘인 조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 교수는 “결국 조 후보자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문 대통령도 조 후보자를 절대 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이다. 즉, 조 후보자를 치는 것은 스스로 자기 권력과 삶을 깎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다. 야당 일각에서는 ‘위법이 있다’라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아직까지 없다. 즉, 청문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의혹들은 결국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조 후보의 의혹’ 보다는 ‘민주세력, 중요한 변화를 해라’, 또는 ‘강남진보계의 반성을 바라는 목소리’ 등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손현경·석대성 기자 son89@metroseoul.co.kr

‘촛불 개혁’으로 정권 잡았지만
갈라파고스식 정책 한계 봉착

“이념보다 내로남불이 문제”

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시장이 움직이는데 강남진보가 과도한 개입을 한다고도 했다. 의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맞이할 4차 산업혁명은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시장에 과도하게 개

입한다. 그러니 시장이 제 역할을 잘 못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남진보’가 2030청년층의 큰 분노도 사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특혜 의혹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 이들과 같은 또래인 청년정치인들은 일제히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의 청년세대는 평등과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를 표했고 그의 국정철학에 동의를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아이콘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의혹이 나온 그



전국 기름값 ‘오름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간 첫날인 1일 전국 기름값이 곧바로 반등했다.

/연합뉴스

“국내 보험사 환헤지 비용 증가 재무부담”

투자 목적·대상에 맞는 전략 필요

보험사의 해외투자 증가로 환헤지 비용 역시 늘면서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투자목표와 대상에 맞는 세심한 환헤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임준환 선임연구위원과 최장훈 연구위원은 1일 ‘보험회사 환헤지 비용의 특성’ 보고서에서 “향후 달러 강세, 유동성 부족, 한미간 금리 역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환헤지 비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보험사는 재무 건전성 제도 변화에 대비하고 자산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보험사의 해외투자 규모는 2009년 25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1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21% 늘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의 원화가치 변동을 제거하기 위해 고생상품을 이용해 미래시

점의 매입 때도 환율을 현시점에 미리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헤지 비용은 해외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다.

환헤지 비용은 만기가 짧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인다.

연구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기 3개월 통화선도환 롤오버(roll-over·만기연장) 전략을 1년간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환헤지 비용이 1조8천억원, 만기 1년 통화스와프의 환헤지 비용은 2조1천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환헤지 비용은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보험사는 환헤지 전략을 짜는데 비용 절감과 손익변동성 확대라는 상충관계를 고민하게 된다.

단기로 환헤지를 한다면 헤지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손익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장기로 갈 경우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학업중단 대학생 매년 증가… 지방대 ‘비상’

재입학·편입 등 자발적 학업중단
지방 소재 대학생 중단 비율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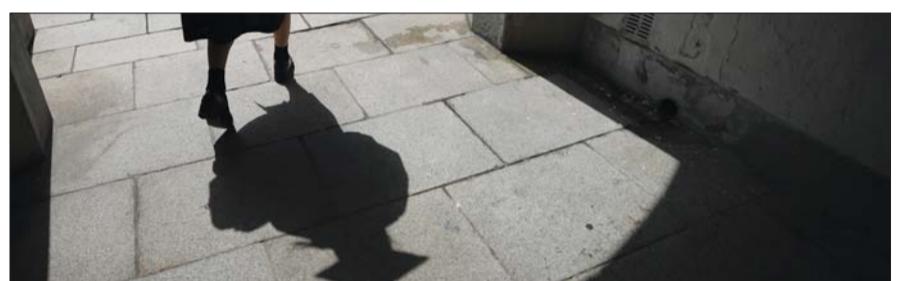
자퇴 등 학업을 중단하는 대학생이 매년 증가 추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상위 대학 재입학·편입이나 전공을 바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업을 그만 두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방 소재 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비율이 높아 이를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은 물론 재학생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1일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2018학년도 4년제 대학(일반대학, 교육대, 산업대) 중도 탈락 학생 수는 총 9만4271명으로 재적 학생 대비 4.6%다. 이는 전년도에서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최근 7년간 가장 높다. 연도별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은 2012학년도 4.1%에서 매년 증가해 2016학년도 4.2%, 2017학년도 4.5%로 증가 추세다.

중도 탈락 사유를 보면, 자퇴(55.5%)가 가장 많고, 미복학(29.8%), 미등록(10.2%), 학사경고(3.1%) 등의 순으로 자발적인 학업 중단이 대다수다.

교육계에서는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은 진로·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대학 입학’이나 대학 입학 후 부적응 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학교 운영이 부실해 퇴출이 예정된 학교 위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체 대학들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수도권에 서 먼 지역 소재 대학생이 많았고,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



〈2012~2018학년도 4년제 대학 중도탈락 학생 현황〉

구분 (기준연도)	2013년 (2012학년도)	2014년 (2013학년도)	2015년 (2014학년도)	2016년 (2015학년도)	2017년 (2016학년도)	2018년 (2017학년도)	2019년 (2018학년도)
중도 탈락 학생 수	90,215	89,471	87,694	91,085	89,456	93,871	94,271
제적 학생 수	2,122,201	2,213,683	2,205,903	2,173,904	2,133,948	2,088,315	2,061,987
중도탈락 비율	4.1	4	4	4.2	4.2	4.5	4.6

/대학알리미·종로학원하늘교육

되거나 학내 분류로 관선이사가 파견돼 비정상 운영되는 대학들이 많다.

폐교 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중도탈락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경주대(경북 소재)로 재적 학생 2309명 중 무려 742명(32.1%)이 학업을 포기했다. 이어 대구예술대(대전 소재) 13.3%, 송원대(12.8%), 한려대(12.4%), 한국국제대(12.2%), 예원예술대(12.1%), 제주국제대(11.6%) 등

19개교 재학생 10명 중 1명(10%) 이상 학업을 중단했다.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는 서울기술대(10.5%)가 유일하게 10%를 넘었다.

지방 소재 대규모 대학이나 거점 국립대 중도탈락 학생 수도 적지 않다. 중도탈락 학생 수가 1000명을 넘는 대학으로는 대구대(1412명), 조선대

(1407명), 계명대(1391명), 원광대(1356명), 한밭대(1353명), 영남대(1195명), 제주대(1183명) 등이다.

전국 시도별 중도 탈락 대학생 비율은 서울(2.9%), 인천(2.7%), 대구(3.8%), 울산(3.8%) 등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다수 평균 이상을 넘는다. 특히 제주(8.1%), 전북(6.0%), 전남(6.9%), 경북(6.1%), 경남(5.7%) 등 서울·수도권과 면 지역 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비율이 높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선호도가 높은 최상위권 대학들의 중도탈락 학생도 지난해 총 1340명(재적 학생 대비 1.8%)으로 전년 대비 144명 증가했고, 최근 7년간 가장 높았다. 이들 대학 중도 탈락 학생 수는 2013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